

第4章 한·미 FTA가 金融産業에 미치는 影響 評價

河 駿 垞

한·미 FTA 협상이 지난 4월 2일 마침내 타결되었고, 5월에는 협정문도 공개되었다.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 협정문 본문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 금융협정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부속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따른 예외항목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한·미 FTA 금융협상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부문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그 영향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1. FTA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유형들

한·미 FTA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FTA의 대상이 되는 금융개방의 유형들을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다. GATS에 의하면, 금융개방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유형은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모드(Mode) 1은 ‘국경간 거래’로서 소비자가 국내에 있고 서비스공급자가 외국에 있는 유형을 말한다. 둘째, 모드 2는 ‘해외 소비’로서 국내 소비자가 외국에 가서 외국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이다. 셋째, 모드 3은 ‘상업적 주재’로서 외국의 금융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의 형태로 진입해서 국내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형태이다. 넷째, 모드 4는 ‘자연인의 이동’으로서 외국의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가 자연인의 자격으로 국내에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현재 모드 3, 즉 상업적 주재는 대부분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할 것이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상업적 주재와 관련해서도 요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계 금융회

사들을 국내에서 차별하지 말고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든지 이들의 영업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환경을 고쳐 달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모드 2, 즉 해외소비는 국내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위험부담 아래 미국에 가서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금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이슈가 되지 않는다. 또 모드 4, 자연인의 이동도 상업적 주체가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할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모드 1, 즉 국경간 거래는 허용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국내 금융 부문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만약 예금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어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를 통해 미국에 소재한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국내 예금시장에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따라서 FTA에서 국경간 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보통 개방할 분야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고, 한·미 FTA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한·미 FTA 금융협상에 따른 개방확대의 정도는 국경간 거래를 얼마만큼 허용하느냐, 그리고 상업적 주체와 관련해서 규제나 업무상 편의에 관한 요구를 얼마만큼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2. 한·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 결과

1) 국경간 거래의 추가 개방

한·미 FTA 금융협상 결과, 국경간 거래가 추가로 허용되는 분야는 보험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금융부수 서비스에 국한된다. 우선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는데, 여기서는 ‘비대면 방식’이라는 제한조건이 부과된다. 즉, 소비자가 공급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대면 방식을 유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래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현행법에도 중개사는 국내법상의 자격요

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재하면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을 유지하는 한, 굳이 상업적 주체가 아닌 국경간 거래를 통한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적은 것이다. 현재에도 허용되고 있는 국제교역 관련 보험, 생명보험, 장기 손해 보험 등의 비대면 방식 국경간 거래의 경우에도 그 거래규모는 시장규모의 1%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다.

또 계리, 손해사정, 위험평가, 컨설팅 등 보험부수 서비스업의 국경간 거래도 허용이 된다. 이 중에서 위험평가와 컨설팅의 경우에는 현재 명확한 법규정 없이 허용되던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FTA로 인한 거래규모의 실질적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들 분야에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으나 FTA를 계기로 등록요건을 신설하게 되므로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계리 및 손해사정의 경우 현재 국내법에서 규정되는 자격제한과 유사한 기준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게 되는데, 이들 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는 사실상 자연인의 국내 방문이 수반되어야 확대가 가능하므로 현재에도 허용되고 있는 상업적 주체를 통한 개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업무편의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금융회사가 해외에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감독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유예 후에 허용하기로 하였다. 전제조건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보호,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 기관에 대한 감사권 수행 가능,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 국내 유지 등의 조건 명문화 등이다.

아울러 법적·사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 소재 미국계 금융회사가 백오피스(후선업무) 기능을 미국 본점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후선업

무 기능이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대출·예금·보증 등의 업무를 제외한 인력 채용·인사·회계 등의 업무를 의미한다. 양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의 일부 후선업무 기능을 본점에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부분은 글로벌 경영의 확대라는 금융산업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측에서 요구했던 투자펀드 원화 자산운용의 해외 위탁은 허용하지 않고 2년 후에 재협약하기로 하였다.

3) 공정경쟁

그리고 상대국에 진출할 때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가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협회들은 내국민대우(NT) 및 최혜국대우(MFN)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즉, 당사국(미국)의 보험협회 등 관련 협회는 자국(미국) 또는 제3국(일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국(한국) 금융기관을 불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금융협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이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상대국 금융기관의 자국 내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미국측은 국내 금융회사와 미국계 금융회사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우체국보험 문제이다. 미국측의 논리는 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 진출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시장에서 규제감독 등의 측면에서 우체국보험에 대하여 특혜를 준다면 사실상 미국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체국보험도 다른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 우체국보험이 갖는 공공성을 강조해서 예외를 인정하되 금감위의 협조하에 우체국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규제상의 특혜를 줄이기로 하였다. 한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측은 유사한 논리로 특혜폐지를 요구하였는데, 이들과 관련해서는 이들 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해서 변동사항이 없게 되

었다. 이러한 예외 인정은 미국측도 농업금융, 학자금금융, 주택금융 등의 부문에서 정부의 특혜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상당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금감위의 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등의 감독을 받아온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금감위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4) 투명성

미국 측은 우리나라 금융감독 당국이 규제를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였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도 가능하나 구두 행정지도가 있는 후에 이해관계자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국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사후적으로 행정지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미국 진출 애로 해소 채널 마련

우리 금융회사들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서 우리측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즉, 은행업의 경우 뉴욕주 자산유지 의무 비율이 폐지되기로 결정되면서 비용절감 및 한국계 은행의 신뢰도 개선이 기대되며, 보험업의 경우에도 재보험 담보요건 완화와 관련된 미측의 법개정을 2007년 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증권업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법인 직원자격요건 완화 및 상호인정을 양국 협회에서 협의중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융서비스 위원회 및 보험 워킹그룹 등 정부간 대화채널을 통해 우리 금융기관들의 미국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6) 신금융상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있는 신금융상품의 도입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가 이슈가 되었는데, 신금융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허용되게 되었다. 즉,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을 때, 신금융서비스가 국내법상 허용될 때,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현지법인일 때(즉, 지점 또는 국경간거래의 형태로 신금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그리고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건별 인허가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때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신금융상품이 공급되므로 사실상 큰 변화가 없게 된다.

7) 단기 세이프가드

위기 시 자본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문제도 끝까지 이슈가 되었는데, 협상 결과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발동기간이 1년 이내일 것(단, 필요 시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연장 가능), 몰수(confiscatory) 금지, 이중 환율제(dual exchange rate) 금지, 외환규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약 금지,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초래를 피하고 경제여건 개선 시 해제, 내외국차별(NT) 및 국가별차별(MFN) 금지, 투명한 절차 유지(발동 시 즉시 공포) 등의 조건들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위기 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본유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되므로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내 금융부문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3. 한·미 FTA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서비스는 비교역재로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금융상품 자체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한 추가 개방은 없기 때문에 FTA 금융협상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추가 개방분야가 금융상품 거래가 아닌 부수 서비스의 거래이며, 양국 금융회사들의 업무편의와 관련한 내용들을 위주로 협상이 진행되었음을 고려하면 개방확대의 직접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FTA를 계기로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서 일부 법·규제의 정비가 예상된다. 국경간 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양국 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과 관련한 감독규정 마련, 금감위와 우체국보험과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선진화되고 투명해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들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켜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화는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한국 금융제도 및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규제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시 해당 금융회사 모국(home country)의 규제감독 수준을 명시적·비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중장기적 변화과정 속에서 미국측 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 확대에 좀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영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한·미 FTA 금융협상의 평가

전반적으로 한·미 FTA 금융협상은 금융개방의 일반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개방의 긍정적 측면은 제도개선과 개혁의 촉진 및 선진 노하우 습득이고, 부정적 측면은 단기적 자본이동으로 인한 시스템의 불안정화 가능성이므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되 제도개선 및 상업적 주재의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국경간 거래의 확대가 극히 제한적이고 상업적 주재와 관련한 불편사항은 가급적 해소해 주려 하였으므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개방이 이득이 되는지의 여부는 개방 당사국의 수용능력(absorptive capacity)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금융부문의 발전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협상에서 여러 항목들이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원칙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금융협상이 금융개방의 일반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한·미 FTA가 금융선진화를 가져다 주는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의 금융개방 수준이 이미 높은데다가 양국 모두 비교적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견지했기 때문에 추가적 금융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제도개혁이나 역량강화 등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협정에서는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금융부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FTA가 금융선진화의 촉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금융서비스 위원회 등 양국간 협의채널도 우리나라 금융업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얼마든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또 선진 금융노하우의 습득을 위해 필요한 외국 금융전문인력의 국내 주재를 유도하는 것도 FTA 이외에 국내 생활여건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5.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결국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 제도 보완,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여건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다양한 금융수요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전문인력 부분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국시장 진출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규정의 정비와 함께 외국자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 불공정행위 제재 등과 관련해서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개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융개방이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이해관계와도 합치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대출채권, 서민자활 대출채권 등의 유동화시장을 조속히 육성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아울러 외국 금융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특정지역을 금융클러스터로 시범 지정하여 영어사용·교육·의료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미 FTA 금융협상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들과 금융규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